

Unification
www.un4u.org

통일백서

R
320.951
E 363 E
2004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백서

2004

UNIFICATION WHITE PAPER

국회 도서관



01014753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산가족 1세대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교류 지속경비 40만원의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노력 등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3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7,109건으로 이중 34%인 5,745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1,254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도 4건의 방북상봉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4건이 성사되었다. 2003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388건, 서신교환 961건, 제3국 상봉 280건, 방북상봉 4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성사되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비교적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들에게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12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가족 정책 및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산, 대전, 청주, 창원 및 안산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총자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민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3,113
민간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8,612
차원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254
차원	방북상봉									1	5	4	5	5	4	24
당국	생사확인	65										792	744	133	963	2,697
당국	서신교환											39	623	9	8	679
차원	방남상봉	30										201	100			331
차원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1,336

3.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2003년 12월 현재 휴전이후 남북된 자 중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6·25전쟁 기간중 남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에는 7,034명이 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6·25 참전 행방불명자(실종자)를 1만9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2003년 말 현재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4명이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 등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차례 남북장관급회담과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4-6)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제기하였다.

다만, 북측이 남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포함시켜 생사확인·상봉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도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3명이 상봉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12명의 남북자와 국군포로가족이 상봉을 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자 관련단체들(남북자가족모임, 남북자가족협의회,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 설명 기회를 수시로 갖는 등 관련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4.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이산가족 정보교류 및 가족상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개설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2만 2천여명의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이 접수되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8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과 생사확인·서신교환 추진의 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초에는 고령의 이산가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음성안내 지원을 받아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영상편지, 서신을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유도·지원하고 향후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자료들을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자명부 열람 등을 통해 남북자, 국군포로 등의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검색 등 검색 서비스도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